

Ⅶ. 요약 및 결론

전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의 재정 불안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역시 DB형이 감소하고 DC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DC형 제도가입자들은 공적 연금 제도나 DB형 제도에서 일반적인 연금 방식이 아니라 일시금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논의의 핵심은 DC형 제도의 바람직한 급여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급 방식 측면에서 DB형과 DC형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퇴직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데 노출된 리스크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퇴직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과정에서 투자 리스크, 장수 리스크, 재무 행태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일시금, 연금, 프로그램 인출과 같은 지급 방식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국의 지급 방식을 비교해 보면, DB형의 경우 연금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DC형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영국의 경우 DC형에 대해서도 일시금 인출을 25% 이하로 제한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75세 도달 전까지 연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DC형 가입자들은 주로 일시금 위주로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금 방식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해 미국의 경우에도 재무 행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과 장래 기대여명을 활용하여 일시금 방식에 내재된 리스크를 연금 방식과 비교·분석한 결과,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리스크 수준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생존 기간 중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이 최대 30% 수준까지 높아지는 반면, 적절한 분산투자를 할 경우에는 6%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시금 방식에서의 자산 부족리스크는 개인들의 자산배분

전략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퇴직 자산을 일시금 방식으로 수령한 후 지속 가능한 소득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는 효율적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재무 행태 연구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고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축적된 자산을 지속 가능한 소득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일시금 방식만으로는 투자 리스크와 장수 리스크를 통제하여 안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 지급 방식은 퇴직 소득의 안정성은 극대화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극소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퇴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급 옵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인출·연금 방식과 같은 소득 흐름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프로그램 인출 방식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일시금과 연금 방식의 절충형으로서 일시금에 비해 투자 리스크와 장수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설계 방식에 따라 유연한 소득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데 적합하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현재 일시금만을 지급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인출 방식과 같은 더 많은 옵션들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제2안은 일시금(프로그램 인출)과 연금을 혼합한 방식이다. 먼저 공적 연금과 연계하여 적정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최저 의무 연금을 검토해야 한다. 전체 퇴직 자산에서 최저 의무 연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산을 차감한 후 나머지 퇴직 자산은 일시금이나 프로그램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혼합 방식의 다른 방안으로서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하는 장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퇴직 자산의 10~15% 수준을 활용하여 거치 연금을 구입하는 장수 연금 의무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연금 가입 방식으로서 퇴직자들이 일시금을 수령한 후 개별적으로 개인 연금을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 정보 부족 등 바람직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연금 형태의 의무 연금화를 제안하였다.

제3안으로서 지급 옵션의 기본형을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도록 하지 말고, 일정 기간(2년) 동안 프로그램 인출·연금과 같은 소득 흐름 방식을 체험한 후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는 재무 행태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프로그램 인출이나 연금 방식의 옵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을 줄이고 연금이나 프로그램 인출과 같은 소득 흐름 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의 소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의 정기성·안정성에 대한 효익을 경험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한 후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자는 의도이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시금 이외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가능한 지급 방식을 제시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근퇴법상 및 하위 법규에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 및 운영(자산)관리 계약에 일시금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인출이나 연금과 같은 일시금 이외의 지급 방식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관없이 가입자가 일시금 이외의 수급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당해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지급받거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개인 연금을 구입한 경우에도 연금 세제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퇴직 자산을 활용하여 일시납 개인 연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입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예금 보호 한도(5천만 원)도 일시납 보험료 규모 및 투자 수익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없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층의 기대여명 증가와 짧은 근로 기간으로 인해 근로 소득 없이 생존해야 하는 퇴직 이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의 지급 방식에 대한 국제적 현황과 논의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바람직한 지급 방식과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지급 방식은 어느 특정 형태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일시금, 프로그램 인출,

연금을 배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시킬 수 있고, 재무 리스크 및 장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긴급 자금 수요 및 상속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처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할 경우 투자 리스크와 장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퇴직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연구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